

※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.

행정법총론

1.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원칙은?

오늘날 ()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,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,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.

- ① 법률우위원칙 ② 법률유보원칙
③ 명확성의 원칙 ④ 소급입법금지의 원칙

2.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.
②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.
③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.
④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.

3. 다음은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. (ㄱ)과 (ㄴ)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은?

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(ㄱ)이나 (ㄴ)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,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(ㄱ)이나 (ㄴ)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.

- ㄱ ㄴ
①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
②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
③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
④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

4.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행정절차법」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.
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.
③ 판례에 따르면,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.
④ 판례에 따르면, 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.

5.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할 경우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.
② 내용이 법률상으로도 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해야 한다.
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④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.

6.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이므로, 행정청이 도로를 보수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.
② 행정행위는 당해 행위로써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,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.
③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, 행정청이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.
④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,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권과 같이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.

7.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.
②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집행력을 가진다.
③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·무효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구속력이다.
④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재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다.

16.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은 그 자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② 행정청은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그 시정을 별도로 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선행 계고와 후행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- ④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비상시의 경우라도 생략할 수 없다.

17. 「국가배상법」상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절차상의 위법도 「국가배상법」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.
- ②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직무행위에는 국회의 입법 작용도 포함된다.
- ③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된다.
- ④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.

18.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·형식·절차상의 위법은 물론,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.
- ②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, 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.
-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자신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.
- ④ 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는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19.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.
- ② 무효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-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.
-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된다.

20.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현행 「행정소송법」은 적극적인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.
- ② 현행 「행정소송법」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,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.
- ④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.